

지역균형뉴딜
농촌재생
특별포럼
F O R U M

지역균형뉴딜
농촌재생
특별포럼

지역균형뉴딜 농촌재생 특별포럼 F O R U M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I . 행사개요

II . 프로필

III. 개회사 및 환영사

IV. 발제

1. (제1발제)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
2. (제2발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추진전략

V. 패널토론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추진전략 세부 추진 방안

I . 행사개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 계획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과 함께 농촌은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의 위상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논의 할 필요
 - 난개발 정비·농촌다움 복원·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 및 농촌재생뉴딜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 추진
- 일시/장소 : 12월 22일(수), 15:00~17:30 /TheK호텔, 거문고B홀(서울 양재동)
- 주최 : 정책기획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참석 : 30명 내외(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 농식품부 / 농특위 유튜브 채널 동시 송출
- 행사 명칭 및 주제 : 지역균형뉴딜 「농촌재생 특별포럼」
 -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 행사 진행 방식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기조 발제 후 패널 토론
 - 발제 : ①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
 - * 부제 : 지역균형뉴딜 무대로서의 농촌의 가치와 문제점
 - ②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추진전략
 - * 부제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
 - 토론자 : 국책연구원, 정부기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6명 내외
 - * 좌장 : 성경룡 농촌재생뉴딜위원회 위원장

세부 행사 계획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등록 및 개회	14:30~15:00 (30')	<등록>
	15:00~15:20 (20')	○ 기념사진 촬영 ○ 국민의례 ○ (개회사)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환영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발제	15:20~16:00 (40')	○ (제1발제)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 * 부제 : 지역균형뉴딜 무대로서의 농촌의 가치와 문제점 - 발제 : 김돈곤 청양군수(농어촌군수협의회 사무총장) ○ (제2발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추진전략 * 부제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 - 발제 : KREI(포용성장·균형발전 연구단장) 송미령 박사
휴식	16:00~16:20 (20')	휴식 및 토론 준비
패널 토론	16:20~17:20 (6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추진전략 세부 추진 방안> ○ 좌장 : 성경룡 농촌재생뉴딜위원회 위원장 ○ 패널 :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장내 정리	17:20~17:30 (10')	○ 마무리 및 장내 정리

Ⅱ. 프로필

주요 참석자 프로필

사 진	성 명(직 위)	주 요 경 력	비 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2019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2018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 2015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 위원장)	·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 장 · 2014년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 실장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김홍상 (KREI 원장)	· 2021년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 ·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김돈곤 (청양군수)	· 2021년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 사무총장 · 2018년 충청남도 청양군 군수 · 2015년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국장	발제자

사 진	성 명(직 위)	주 요 경 력	비 고
	승미령 (KREI 연구단장)	·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 2021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 2021년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발제자
	성경룡 (농촌재생뉴딜 위원회 위원장)	·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2008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 200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좌장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21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前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前 경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실장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토론자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2010년 오하이오주립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 2008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석사)	토론자

사 진	성 명(직 위)	주 요 경 력	비 고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 2021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 2020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탄소중립분과위원 · 2019년 경기도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토론자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	· 現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現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토론자

Ⅲ. 개회사 및 환영사

개 회 사

2021. 12. 22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 종 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구조의 대전환과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 주최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토론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돈곤 청양군수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성경룡 농촌재생뉴딜위원회 위원장님과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국토연구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님, 박인권 서울대 교수님, 정책기획위원회 오현석 위원님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신현유 부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저밀도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이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난개발과 생활 및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역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의 팽창과 산업적 개발 확대로 인해 주거지에 공장과 창고가 혼재되면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농간 성장 및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농촌이 활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농촌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농촌 공간계획과 이에 토대한 농촌재생뉴딜이라고 할 것입니다.

농촌이 농촌주민과 도시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활력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공간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제조업체, 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제도의 보완과 함께 농촌형 용도지구제 도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인 공간으로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농촌재생뉴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도시와 농촌,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이 서로 연결되어 생활 및 사회 서비스가 불편함이 없이 공급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분야별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투자가 아닌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관련 기관이 협업하면서 농촌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함께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경관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여러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식품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 종 훈

환영사

2021. 12. 22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겨울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오늘 포럼이 더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라서 이 자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농촌재생특별포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고견을 들려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7개월은 우리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 7개월은 문재인 정부가 한편으로는 거듭되는 극난급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함으로써 강력한 ‘위기대응역량’을 보여준 시기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는 지구적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미래대응역량’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대응과 미래대응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위기에 강한 정부’이자 ‘미래를 여는 정부’, ‘복지를 확장한 정부’이자 ‘권력을 개혁한 정부’, 나아가 ‘평화를 여는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과 미래대응의 한복판에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문명사적 위기와 지구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이 지난 7월로 2년차를 맞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의 세 축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기반 축으로 하는 보다 분명한 체제를 갖추고, 예산 또한 160조에서 220조로 전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2.0’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입니다. 지역이 한국판 뉴딜 진화의 원천이자 동력입니다. 주지하듯이 지역의 위기가 엄중합니다.

이 엄중한 위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촌과 농업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과 농업에는 지역위기와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라는 3종의 위기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농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지역소멸로부터 지역주민을 살리는 일이자, 기후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일이며, 먹거리위기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농촌은 우리의 현재이자 새로운 미래입니다. 위기를 넘어 미래를 여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진화된 농촌재생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분산적이고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농촌재생정책들이 훨씬 더 통합적 구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농촌의 재생과 공간계획이 지역재생전략과 탄소중립의 기후재생전략, 안전한 먹거리 재생전략의 방향과 결합되어 보다 복합적이고 근본적 구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재생을 위해 부처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농촌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며 통합적 농촌재생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농촌이 국민의 일터이자 삶터이자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공감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시대적 과제에 맞게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고, 난개발 정비, 농촌특성을 고려한 경제기반 및 정주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구체적 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와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농촌과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우리 공동체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점에서 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과 농민과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농촌과 농민과 농업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지역균형뉴딜과 농촌재생뉴딜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환영사

2021. 12. 2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오늘 포럼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전략을 주제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조대엽 위원장님, 김종훈 차관님,
좌장을 맡아 주시는 성경룡 위원장님과
김돈곤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생활기반이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는 한편,
인구 감소와 활력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자연과 휴양에 대한 관심,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매년 귀농·귀촌인 가구와 4도3촌을
지향하는 관제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세상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도록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농촌이 지속가능한 곳이 되려면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해소하는
농촌 공간으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전략으로
구체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면
농촌이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로서 작동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촌의 활력이 증대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촌공간의 균형 잡힌 보전과 발전을 위해,
농촌특성을 살린 공간계획 제도화와
다양한 기초 서비스 제공 방안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재생뉴딜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환영사

2021. 12.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

오늘 정책기획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포럼에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직접 참여하신 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은 일반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건강, 고용 등 대부분 분야에서 도시와 비교해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방치된 빈집, 축산 악취, 공장·재생에너지 시설 등은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총인구는 증가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 상당수가 농촌을 새로운 활동 무대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창업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밀도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의 첫 단계는 농촌공간에 적합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 토지이용 제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농촌은 인구밀도와 구성, 산업 구조 등이 도시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도시·군계획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농촌공간에 대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개편, 농촌형 용도지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뉴딜사업이 필요합니다. 농촌공간재생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가장 적절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협약을 통해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계획제도와 농촌공간재생뉴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세상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어촌 지역이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좋은 제안과 의견이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홍상

IV. 발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양군의 전략과 제언

2021. 12.





설명순서

I

청양군 현황과 여건

II

지역소멸위기 대응 전략

1. 복지 정책 (공공의료복지서비스 강화)
2. 청년정책 (청년지원정책 확대 운영)
3. 주거정책 (정주여건 개선)
4. 일자리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지역공동체 정책 (민관거버넌스 강화)

III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충남의 중심, 충남의 알프스

편리한 교통망

서울 1시간
4개 고속도로

최적의 자연환경

칠갑산 (도립공원)
청양 10경

전국최고 자원봉사

29단체
12,714명

전통적인 농업군

푸드플랜
고추, 구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

고령화율

37.0%
(도 16.7%)

가임여성비율

13.0%
(도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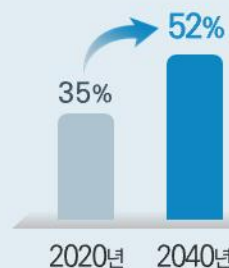
인구감소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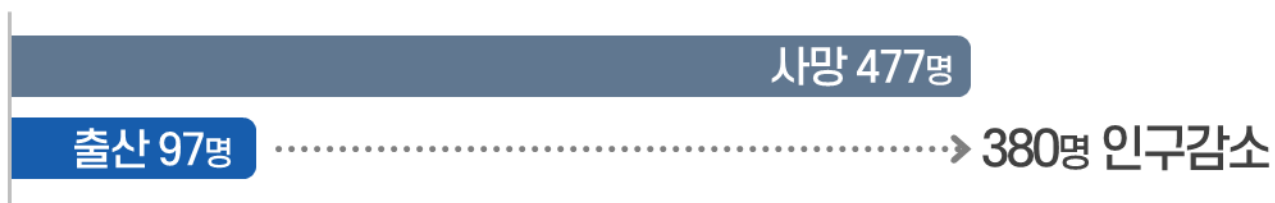


고령화

청양군은 충남의 중앙에 위치, **인구소멸 위험지역**

인구 감소 실태

- ✓ 자연적 인구 감소 심각 : 2020년 출산 97명, 사망 477명



- ✓ 사회적 인구 감소 심각 : 2019년 전입 2,598명, 전출 2,8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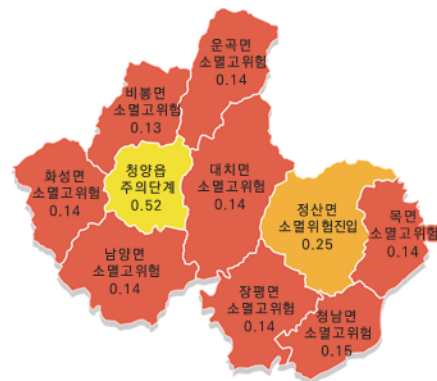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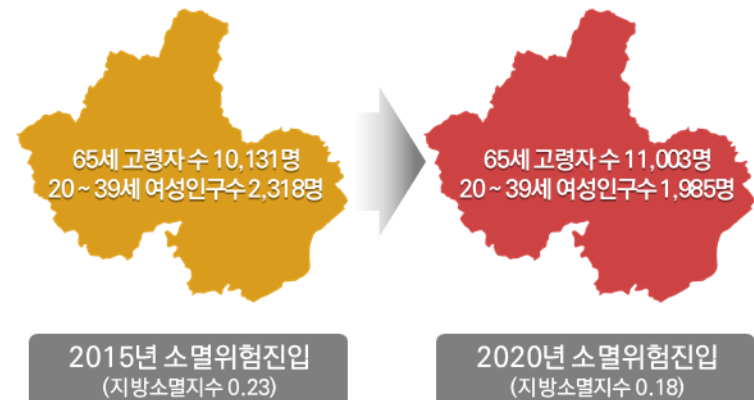
- ✓ 연간 600여명 인구 감소 속도이기에 조만간 인구 3만 유지 어려움

- 5년 후 3,000명 감소 예상 (현 인구 31,240명 → 28,240명)
- 10년 후 6,000명 감소 예상 (현 인구 31,240명 → 25,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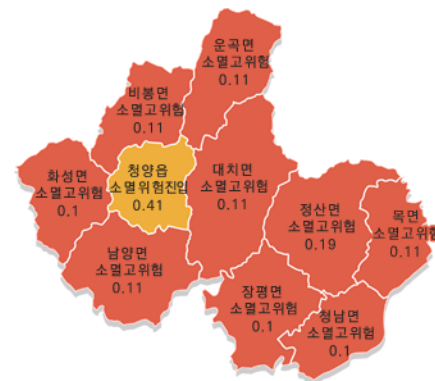
※ 주. 2019년 출산 101, 사망 459, 전출 2,826, 전입 2,598명 (586 인구 감소)

지방소멸위험

- ✓ 2015년 소멸위험진입 ⇒ 2020년 소멸고위험
- ✓ 지방소멸지수
= 20 ~ 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고령자 수
 - 0.2 미만 : 소멸고위험
 - 0.2 ~ 0.5 : 소멸위험진입
 - 0.5 ~ 1.0 : 주의단계
- ✓ 읍면 지방소멸지수 분석



2015년 읍면 지방소멸지수 (청양군 0.2288)



2020년 읍면 지방소멸지수 (청양군 0.1804)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 극복



인구정책은 단위사업이 아닌 종합정책
청양군의 방향성 갖고 일관된 사업추진에 역점

1. 복지 정책 (공공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청양군 보건의료원 현실

- ✓ 국가 5대암 검진 불가 보건의료 낙후지역 (충남 청양, 경남 산청, 경북 울릉)
- ✓ 진료 전문성 취약 (전문의 0명, 공중보건의 의존)
⇒ 치료를 위해 인근 공주시, 홍성군 등으로 방문 (시간적·경제적 부담)

검진센터 개소

- 6대 암 검진, 무료 혈액종합검진, 폐CT 검사 등

전문의 채용(5명) 및 최신 장비 비치

- 전문의 : 내과(2),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 장 비 : 내시경, 흉부 방사선 촬영기, CT기, 검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 25인 이동진료 버스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

- '22년 준공 / 39억원 / 3층 84대



▶▶ 진료인원 39% 증가 ('18년 5.8만명 ⇒ '21년 8만명) ▶▶ 진료수입 86% 증가 ('18년 12.1억원 ⇒ '21년 22.5억원)

보건의료원 국가 암 검진 수검율 전국 3위, 충청남도 1위 ('21년)

※ ('20년 기준) 전국 250위 ⇒ 3위, 충청남도 15위 ⇒ 1위

1. 복지 정책 (공공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청양군 복지 현황

- ✓ 건강이 취약한 독거·고령 노인의 증가에 따른 돌봄 불안 증가
 - * 60세 이상 48%(30,390명중 14,762명), 65세 이상 37% (11,182명)
 - * 65세 이상 홀로 사는 가구 3,675명(세대)로 32% ('21.11월 기준)
- ✓ 노인의 건강은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
 - * 돌봄 부족과 건강의 악화로 결국 병원, 요양시설로의 입소 등 사회적 입원 증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선도모델 선정 ⇒ 전국으로 확산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19 ~ '21년 / 43억원)
- ✓ 고령자 복지주택건립
 - 청양읍 교월리 / '22년 준공 / 285억원
(국 146억, 지방비 94억, 기타 45억)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 청양읍 교월리 / '21년 준공 / 37억원



2. 청년정책 (청년지원정책 확대 운영)

기존 청양군 청년정책 문제

- ✓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만18세~45세) 21.0% 차지 (31,034명 중 6519명 / '20.5월 기준)
- ✓ 국도비 지원사업 제외한 자체 추진사업 전무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사업 필요성 대두

2021년 청양청년의 해 선포

청년 일자리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타운 조성
-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
 - 액션그룹(30팀 300명), 학습동아리(6팀, 200명), 스타트업(15팀, 150명)을 통한 인재 육성 지원
 - ⇒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2021.08)



주거공간 확보

- 셰어하우스 건립, 귀농·귀촌의 집 운영
- 임대주택 건축 (400세대) ⇒ 100세대 청년주택 분양

청년 활동공간 확대

- 청춘거리 조성 : 청춘거리(청양읍중심지활성화 사업 대상지) 청년사업 집적화
⇒ 내일이U센터(30억), 청년LAB(3.5억), 블루쉽하우스(11억), 청년마을 만들기(5억), 한달창업 in 청양군(한달살기 프로젝트), 누구나 가게 운영 등 추진
- ※ 충남 최초 청년수당, 취업알선수당 제도 확립

3. 주거정책 (정주여건 개선)

열악한 청양군 정주여건

- ✓ 도시중심지 기능 쇠퇴화
- 인구감소 -44.4% (2000년 기준)

- ✓ 주거 및 생활인프라 열악
- 건축물 노후도 84.1% (20년 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 ✓ 읍내 3·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 '22~'25 / 144억원 / 주거지지원형 A=94,500㎡
- 다함께 어울림센터, 어울림광장 조성, 노후주거지 집수리, 기반시설 정비 등

- ① 정주여건 개선
- ② 주민 교류 및 활력공간 마련
- ③ 주민 역량강화사업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 대치면 등 4개 지구 / '18~'24 / 180억
- 다목적센터, 버스정류장개선, 가로환경 정비 등

- ① 기초생활기반 확충
- ② 지역경관 개선
- ③ 지역역량강화



고령자 복지
임대아파트

127세대 공급

공공
임대아파트

400세대 공급

(2022년 120세대 / 2023년 280세대)

민간아파트
(금성백조)

182세대 공급



4. 일자리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양군 일자리 현실

- ✓ 청년들이 청양군에 원하는 1순위 (좋은일자리)
⇒ “5년 후 희망하는 청양” 설문조사시 “좋은일자리가 많은 청양” 47.8%
(341명 중 163명) 응답 ※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분석결과('20.10월)

대규모 산업단지 등 다양한 일자리 확보

- ✓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 비봉면(약 74만㎡) / '19~'26년 / 약 847억원 / 민·관 합동 개발방식
- ✓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 남양면(약 80만㎡) / '25년 준공 / 약 5,000억원 / 스마트팜, 주거·상업·관광시설 단지화
- ✓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
 - 비봉면(약 39만㎡) / '23년 준공 / 790억원 / 소방학교, 119 광역기동단 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 골프장조성
 - 대치면 일원 / '23년 준공 / 약 1,000억원
- ✓ 민간아파트
 - 청양읍 200세대 / '23년 준공 / 약 350억원
- ✓ 기업유치
 - 농공단지(14개 기업/860억원), 일반산단 약 900억원



5. 지역공동체 정책 (민관거버넌스 강화)

지역공동체의 붕괴 문제

-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심각
⇒ **주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중요
※ 동네자치의 근간이 되는 **마을자치** 중점 추진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자치현황

- ✓ 4개 주민자치회, 6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70명, 54개 프로그램 연 2,200명 이용

마을사업연계

- | | |
|--------------|--|
|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 마을계획단 구성 및 주민총회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
| 주민세 동네자치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 연계한 소액사업 지원 ⇒ 동네 + 주민자치 |
|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 주민조직도 및 자치규약 정비 지원 ⇒ 동네자치 활성화 |

우수사례

청양읍 장난감 은행 (2016~)



- 598점, 연 200명 이용
- 2019년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민·관협력체계 구축



- 2020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방문 및 우수사례 전파

주민세환원

청양군, 주민세 활용사업 충남도 평가 '우수상'

| 1000만원 사업비 지원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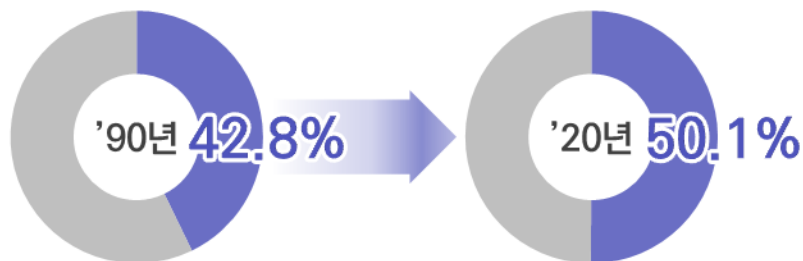
청양군이 2020년 주민세 활용 사업 특화사업에 대한 충남도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우수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이 평가는 주민세 활용실태, 사업계획 및 집행 적정성, 추진성과, 도정 목표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군은 높은 주민세 활용 실적과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특색 있는 사업을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2019년 137백만원, 2020년 118백만원
- **2019·2020년 충남도 우수사례**

1. 농촌지역 소멸위기와 수도권 집중

2011년부터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 조치 2018년 완화

✓ 수도권 인구집중



※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21.12.2.)

✓ 국내 1000대 기업
75.3% 수도권 집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등이 2019년 종료된 이후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 더 가속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대형건물 과밀부담금 부과 등
수도권 규제 제도 부활

지방기업 세제 혜택 지원, 지방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2. 농촌지역 축사 난립

2007년 농지법 개정 후 축사 난립

- ✓ 농지전용허가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 가능
 - 축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악취 등 환경적 역효과와 집단민원 발생 주요 원인



▶ 연평균 78건 민원발생
('19년 46건, '20년 75건,
'21년 113건)

- ✓ 청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18년 7월)으로 신규 축사 건축 사실상 억제 효과
 -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 확대 (300m ⇒ 500m)
 - 주거밀집지역 기준 강화 (20가구 이상 ⇒ 5가구 이상)

개선방안

- ✓ 축사 공동(집단)화 및 현대화사업 지원
(축사 밀집지역과 개별축사 맞춤형 지원)
-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한 무분별한 축사 난립 방지
- ✓ 가축 두수 총량제 도입을 통한 신규 축사 확대 억제
- ✓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 지원 확대

3. 농촌일자리 수급 문제

농촌일자리 확보 어려움

- ✓ 청양군 고추(960ha), 구기자(80ha), 밤(3,400ha) 등 재배하는 농특물 주산지로 농번기 (5월~10월) 평균 연인원 4만여명 인력 필요
 - 농촌인력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여파로 농업인력 수급 어려움
 - ※ 5년전 평균 임금 6~7만원 ⇒ 최근 10~12만원
- ✓ 외국인 노동자 인력관리 및 주거지 확보 필요

개선방안

- ✓ 외국인(우즈벡, 필리핀, 베트남 등) 계절근로자 수급
 - 청양군 ⇄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MOU체결 ('21.9.14.)
- ✓ 외국인 유학생 방학·주말에 시간제 취업을 통한 활용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체류자격 취업활동 제한규정 완화
- ✓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사 및 주거지원
 - 열악한 주거,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 농식품부 관련 **보조사업 확대 지원 필요**



4.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발생

농촌 빈집 문제

- ✓ 농촌 지역 빈집은 붕괴 또는 화재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생활환경 훼손 등 각종 문제 발생
 - 빈집 소유자는 중장기 임대 의향 vs 빈집 수요자는 실거주나 세컨하우스 선호 ⇒ 서로 정보 취득에 어려움

청양군 사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16년 ~ 20년 / 청양읍 등 5개소 / 320억
- 빈집정비,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
- 예비계획 수립시부터 빈집 소유자를 비롯해 다양한 마을관계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내용 공유 및 협력 추진



▣ 빈집비율 '15년 13.2% ⇒ '20년 11.5% 개선 (전국 6.5% → 8.2% / 충남 9.8% → 12.3% 악화)

- ✓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 아파트, 민간 아파트 공급 등으로 빈집 대량 발생 우려

개선방안

-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원 확대 강화
- ✓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보격차 해소
- ✓ 세컨하우스, 귀농귀촌인 활용을 위한 빈집 임차·매입 국비 지원

5. 주민공동체 중심의 농촌다움 복원

주민공동체(주민자치회) 현실적 어려움

- ✓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 전환시 연간 3천만원 가량 지원(인건비, 일상경비 지급으로 대부분 소진)
 - ⇒ 자체 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 등 추진 어려움
- ✓ 지자체별 조례로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 범위 격차 큼

청양군 사례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 강화)

- 4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21년 현재)
- ⇒ '22년까지 10개 읍면 전체 전환
- 2021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지자체) 수상



개선방안

- ✓ 주민자치를 위한 확실한 법률적 뒷받침 필요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인력, 권한, 재정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지원

주민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농촌다움 복원의 주체가 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농촌재생 특별포럼/ 2021. 12. 12. (수)

더 나은 농촌을 위한 제안: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내용

- I. 논의 배경
- II. 농촌 정주공간 현황
- III. 외국의 농촌 공간 관리 사례
- IV.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제도 여건
- V.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과제

1. 논의 배경

새롭게 조명받는 농촌의 역할

-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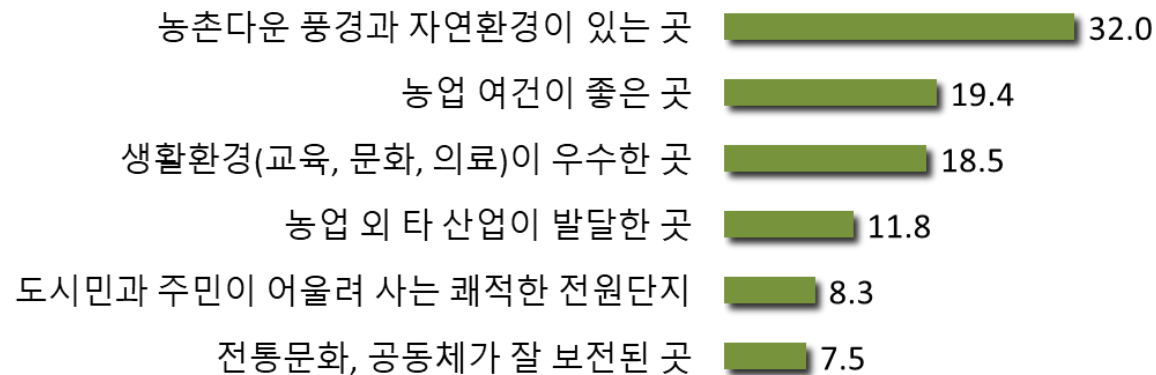
-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 귀농·귀촌 증가
-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확대해가는 전략으로서 **“농촌재생”** 논의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장래 바람직한 농촌 모습 (%)

주: '20년 도시민, 농촌 주민 3,32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거주하는 마을을 이주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 (%) : 사례마을 귀농·귀촌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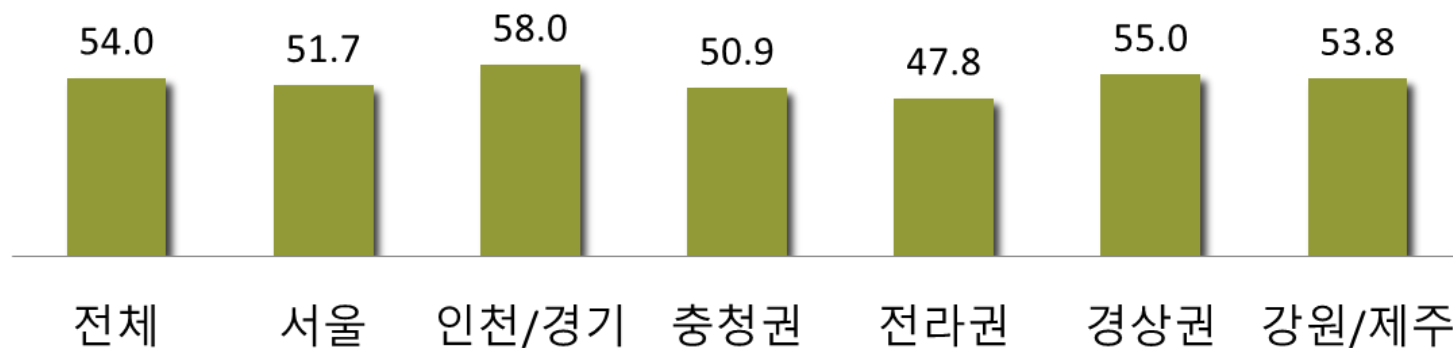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국 102개 농산어촌 패널 마을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294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II. 농촌 정주공간 현황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A) 농촌 난개발 문제 심각성
: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B) 농촌의 토지이용규제 강화 필요성
: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



주: '20년 도시민, 농촌 주민 3,32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도권 근교 농촌 마을의 난개발 현상

▶ (2001년) 농촌지역 아파트 및 공장 입지, 마을 혼주화



▶ (2021년) 개별입지 공장 확산과 농촌 마을 변화



전국 농촌의 다양한 난개발 양상

농촌 마을의 산지 태양광시설 입지



농지 내 소규모 공장의 개별입지



농지에 건립된 축사



도로변 농지에 건립된 태양광 발전시설

전국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 양상



나홀로 주택



산비탈 호숫가에 건설된 주택단지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공장부지 개발



마을 내 방치된 빈집



슬레이트 지붕 주택



재래식 화장실

농촌 자원, 문화경관의 가치 저하

- ▶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다랑논 지대: 전원주택, 농업용 시설, 과수원, 축사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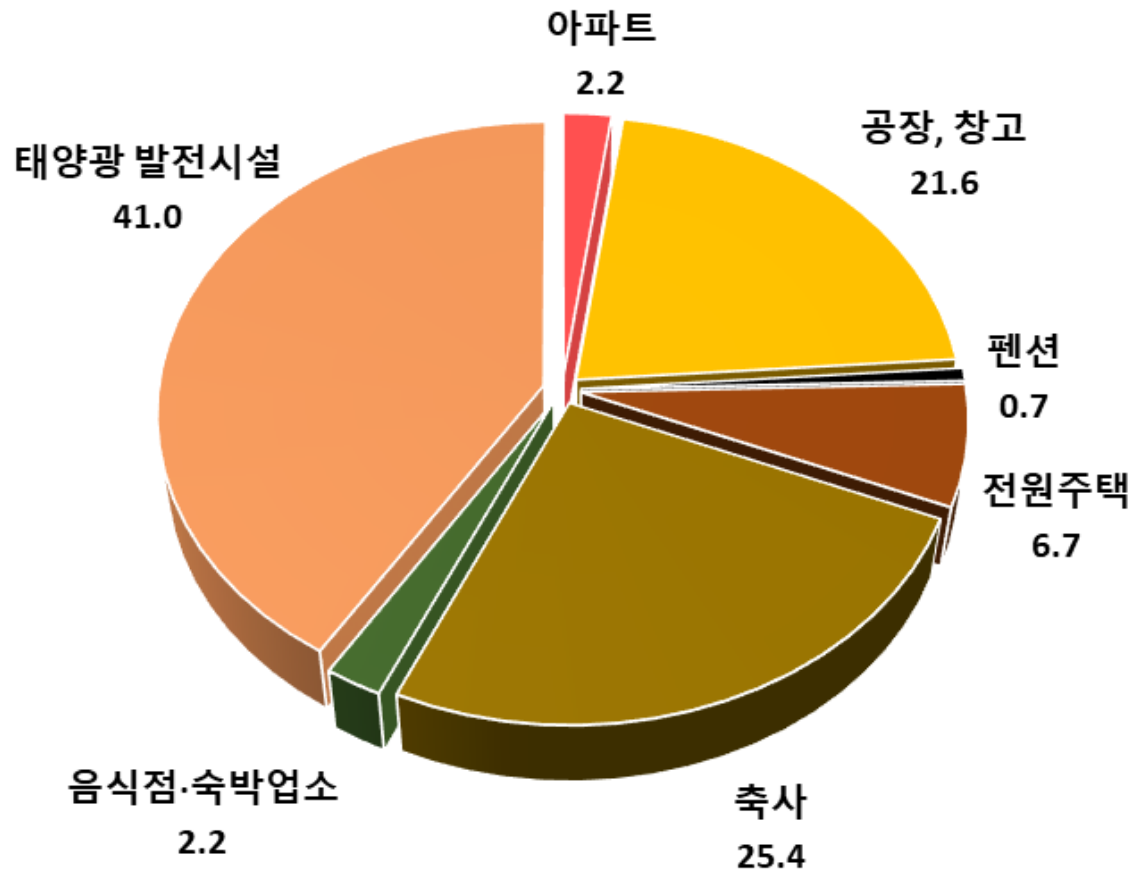
-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 경관자원과 농업용 시설 상충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A)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 종류

(단위: %)



(B) 지역별 대표적 난개발 시설 종류

(권역별 1, 2위 응답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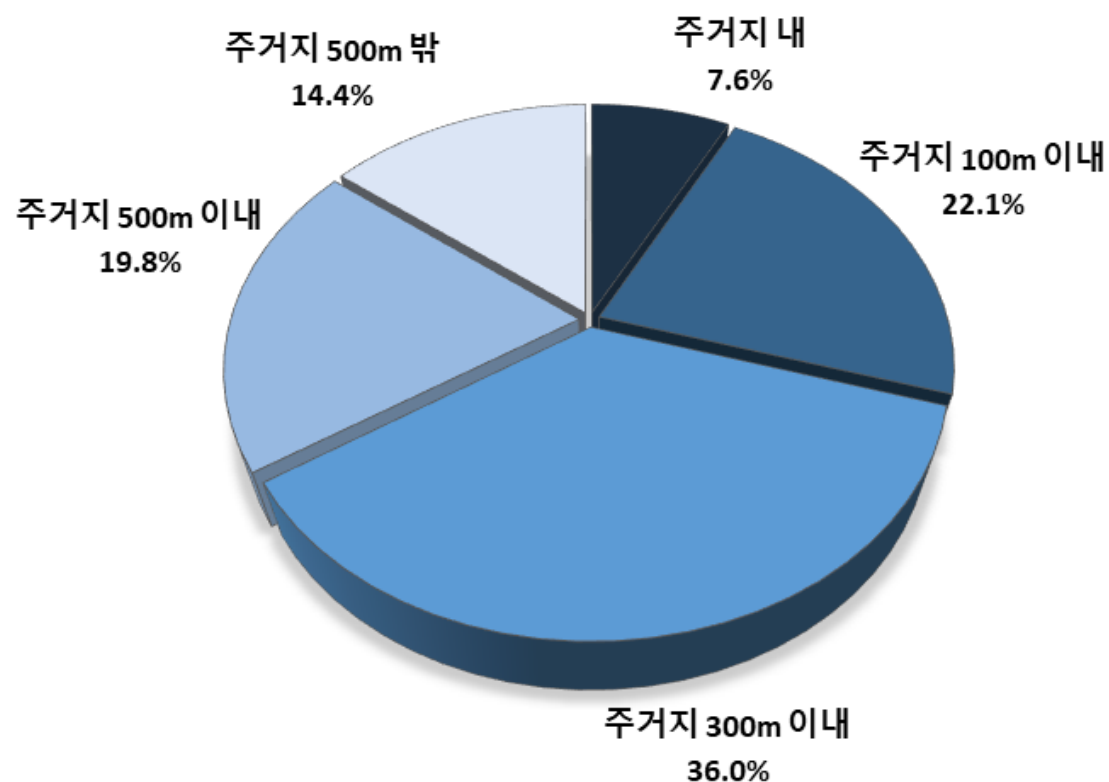
(단위: %)

수도권	공장·창고 (45.8) / 전원주택 (20.8)
충청권	태양광발전시설 (53.3) / 축사 (23.3)
전라권	태양광발전시설 (48.0) / 축사 (44.0)
경상권	태양광발전시설 (40.5) / 공장·창고 (27.0)
강원/제주권	태양광발전시설 (50.0) / 축사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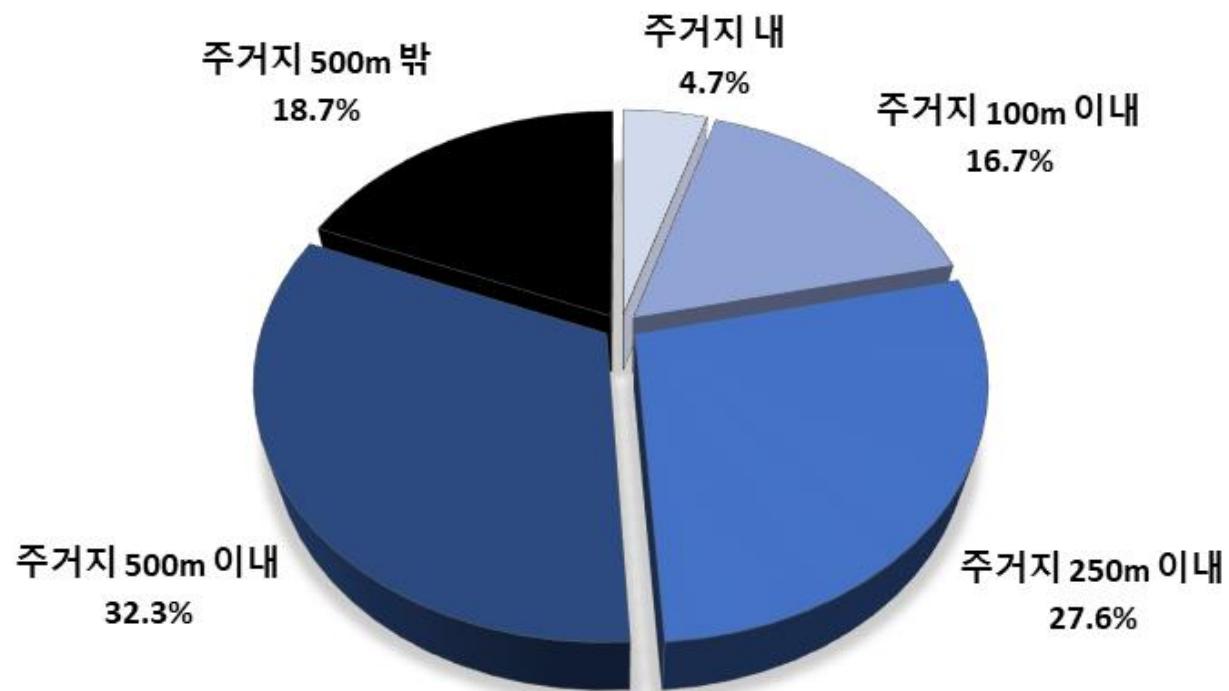
주: '20년 전국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96개 지자체 134명 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주거환경 저해 시설의 분포 현황(공장, 축사)

(A) 공장 이격거리별 주거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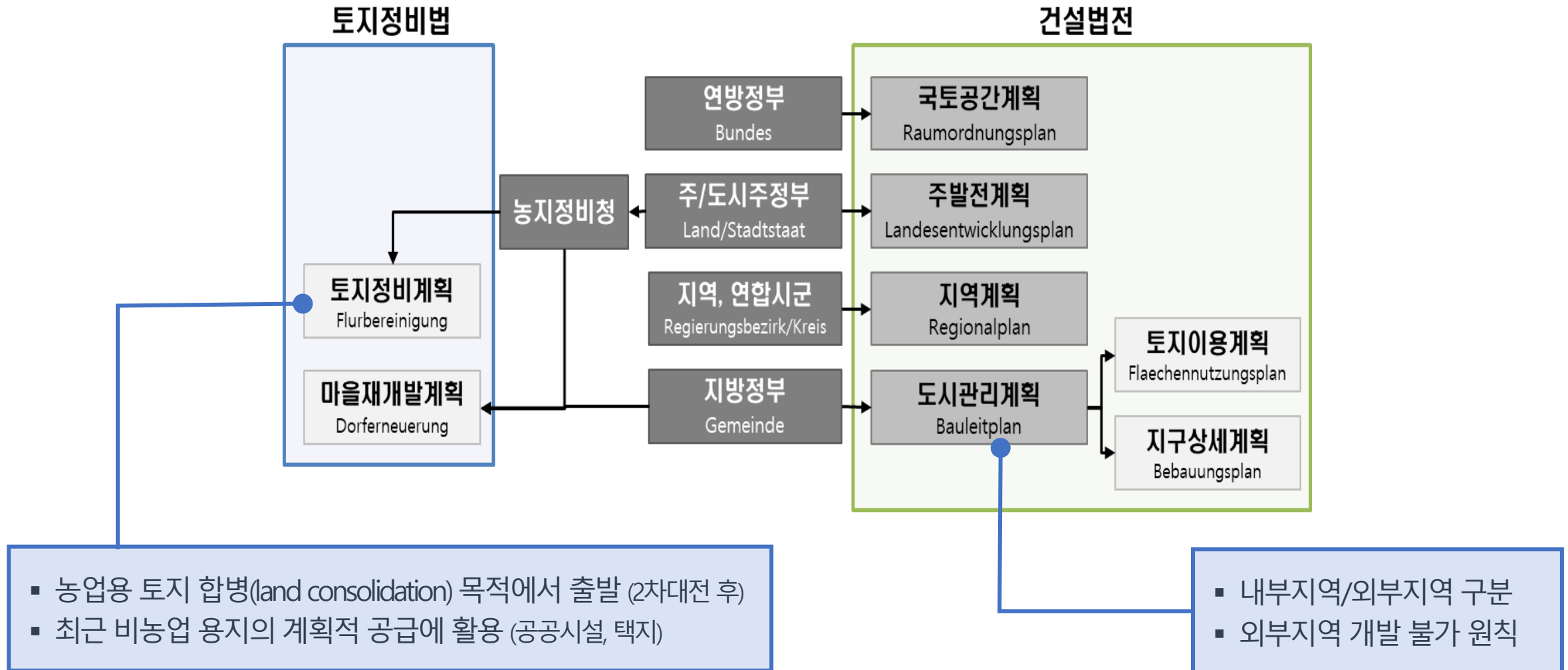
(B) 축사 이격거리별 주거지 분포



Ⅲ. 외국의 농촌 공간 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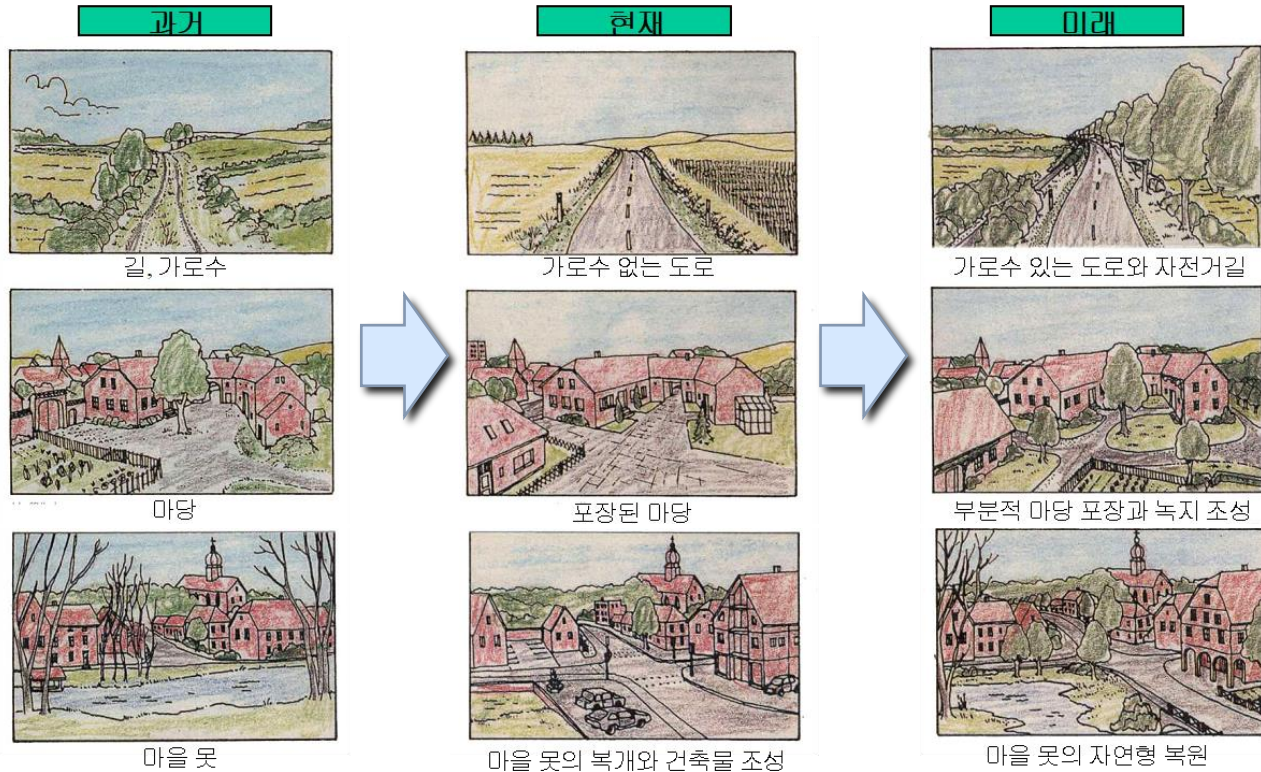
독일 공간계획 제도

▶ 도시지역 중심 공간계획 vs. 농촌지역 토지와 마을 정비를 위한 계획체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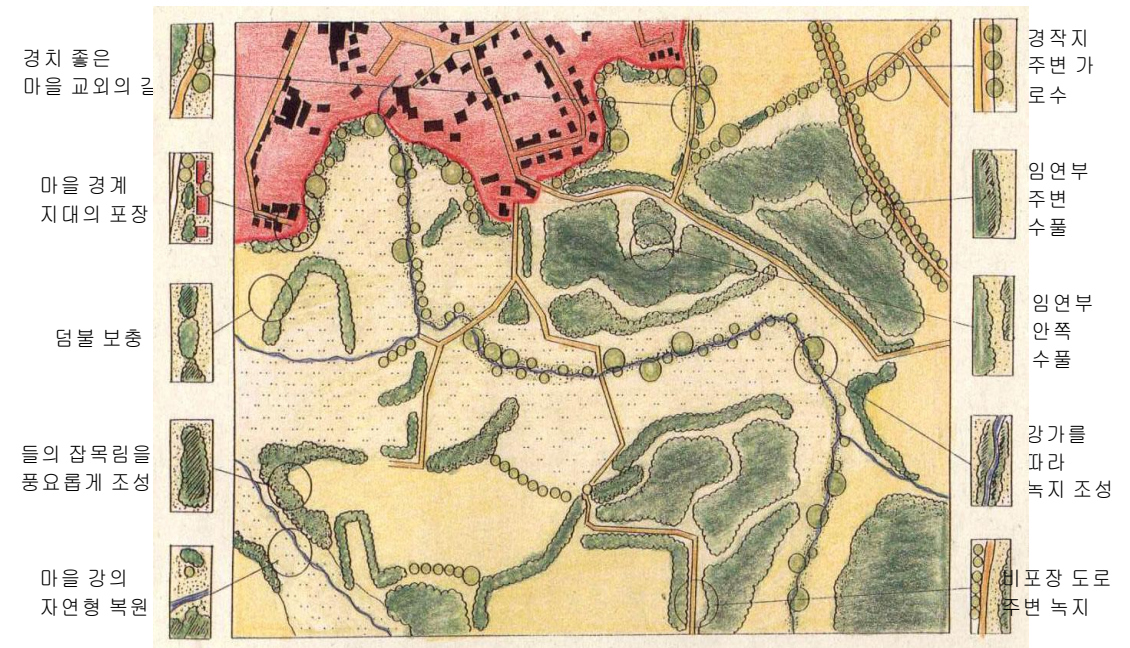


미래 가치 변화를 반영한 농촌 공간 정비 구상

▶ 농촌 마을 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미래 마을 정비 구상



▶ 2000년대의 독일 농촌 마을 경관 모형



*자료: 박시현·송미령, 1999.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독일의 농촌공간계획 및 마을 정비 사례

▶ 바이에른주 딥골스하우젠 마을(Dingolshausen)

- 인구 1,302명 / 면적 130km²
- 주민 참여 마을재정비사업 추진(1995~)
- 폐가 리모델링 및 철거 후 재건축, 노후주택 정비, 친환경 하천 복원, 도로 정비, 공공건물 등 리모델링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15개 마을 단체 참여



가로정비사업 전후 마을 변화



직선형 하천 공사(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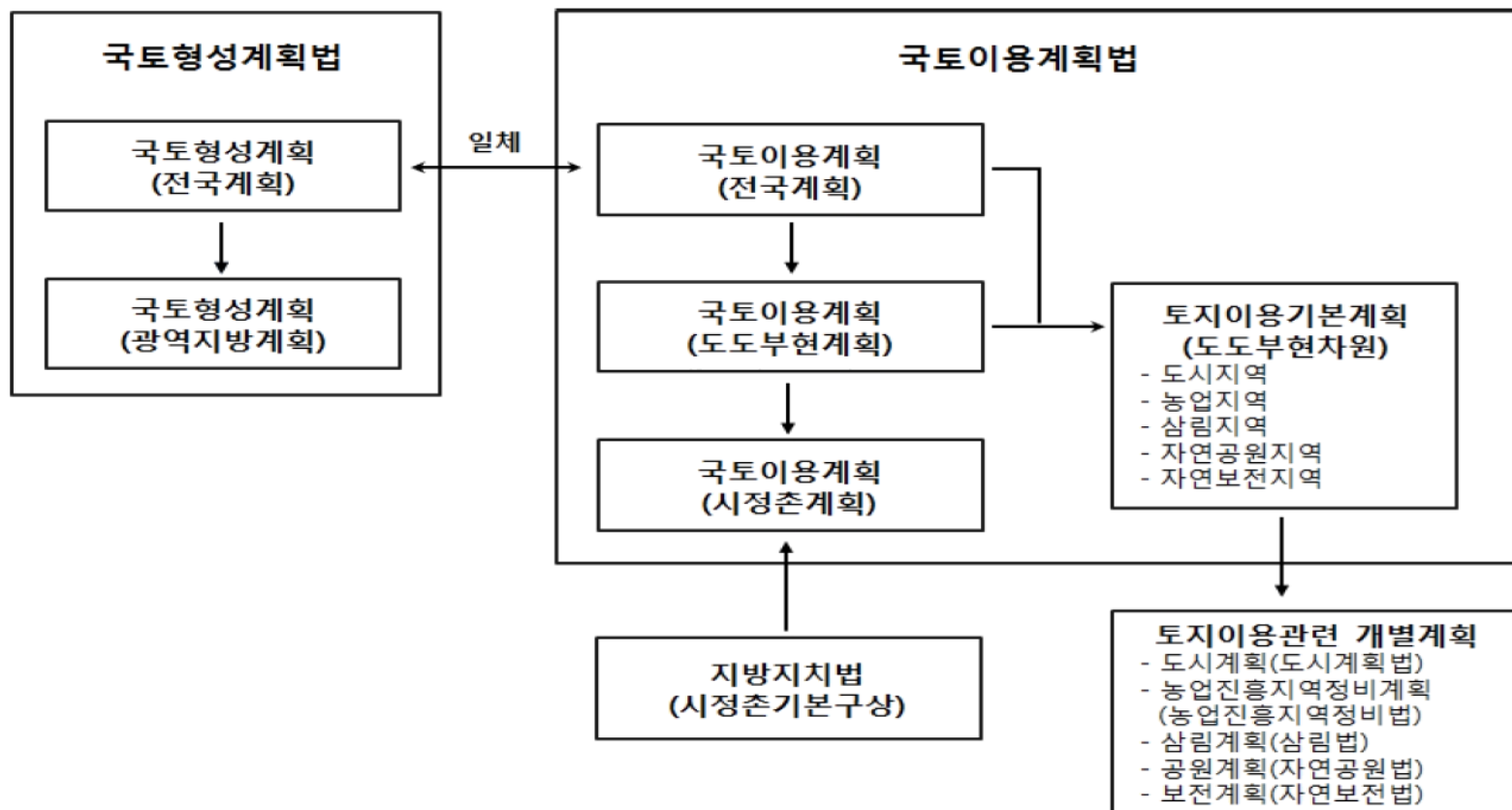


곡선형 하천 복원(현재)



일본의 공간계획제도와 전국 용도지역 구분

▶ 일본 국토공간계획제도 현황



▶ 일본의 용도지역 구분 현황

도시지역	도시계획법
농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산림지역	산림법
자연공원지역	자연공원법
자연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일본 시정촌 계획에 의한 농촌 토지 용도 구분 사례

▶ 농촌 특성을 살린 다양한 토지 용도를 시정촌 계획에 의해 지정, 운영

지역 명	토지이용 용도 구분(지역,지구,구역 등) 기준						
	농지(농업)보전	산림보전	하천습지보전	경관보전	집락환경조성	도농교류농산업육성	거점시설배치
사사야마시 쿠로다지구	○	○	○	○	○	○	
나가노현 송천촌	○			○	○	○	
나가노현 호타카정	○	○		○	○	○	○
나가노현 아즈노미시	○	○		○	○	○	○
나가노현 이다시	○	○			○	○	○
시가현 오쓰시		○		○			
이와테현 다키자와시			○		○	○	○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	○	○
시즈오카현 이즈시		○			○	○	○
후쿠시마현 미하루마치	○	○		○	○		○
효고현 사사야마시		○		○	○	○	○
니가타현 미나미오우누마시	○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및 공동체 주도의 공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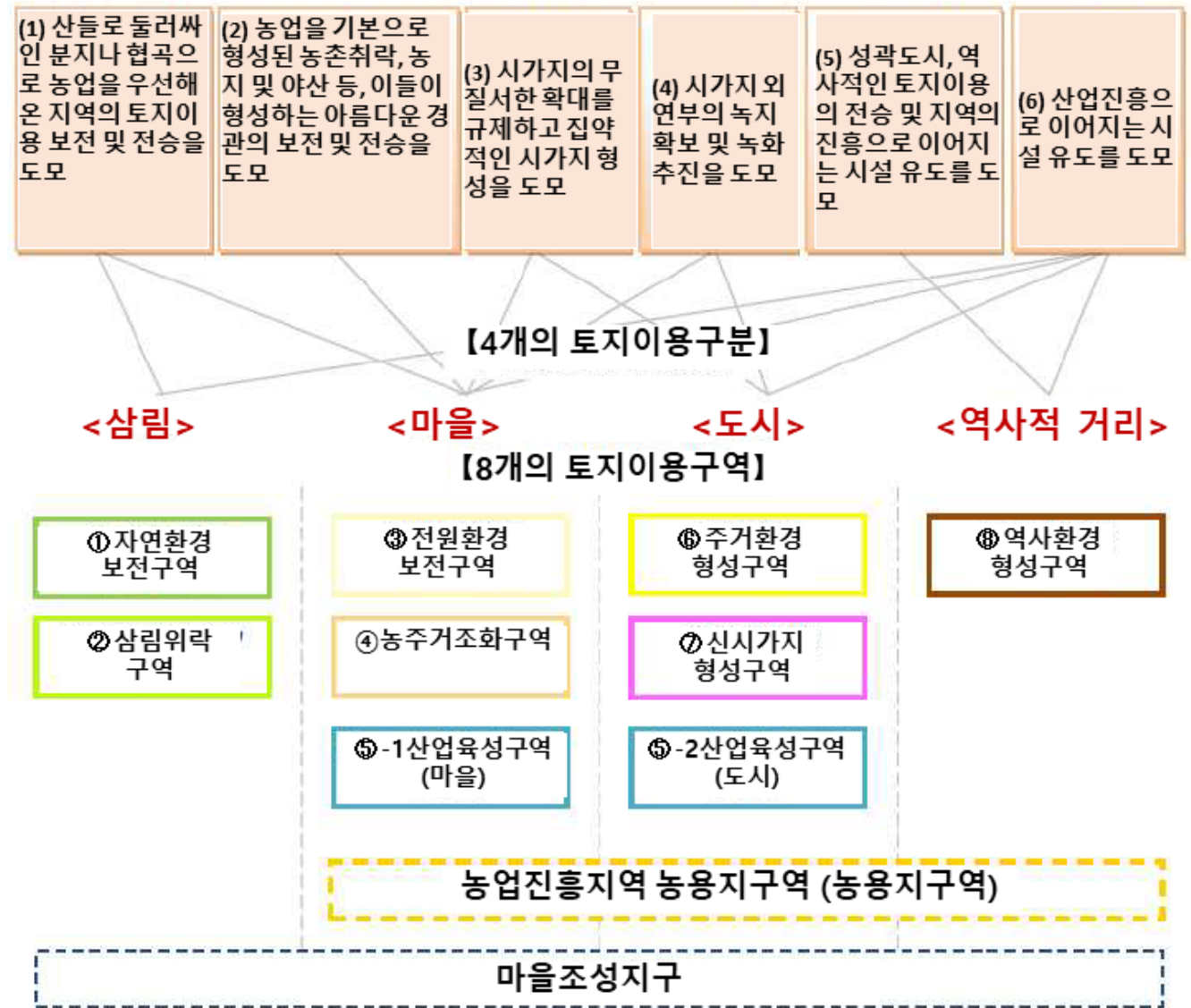
농촌 토지이용기본계획 사례 : 효고현 사사야마시(篠山市)

4개 용도 8개 세분 구역

+

마을조성계획지구(조례 입각)

- 사전협의와 시민설명회 의무 개최
: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 시 마을조성심의회 개최
- 지구별로 수립한 「마을조성계획」으로 토지이용관리
- 2011년 「경관계획」 수립
: 토지이용기본계획, 마을조성계획 연계



외국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공간계획 수립

- ✓ 도시계획과는 차별적인 접근법에 입각한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이 존재

◆ 농촌의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보전 원칙 견지

- ✓ 농지 보전 원칙 중시: 신규 개발은 기존 시가지 중심으로 유도

◆ 농촌의 미래 가치를 계획을 통해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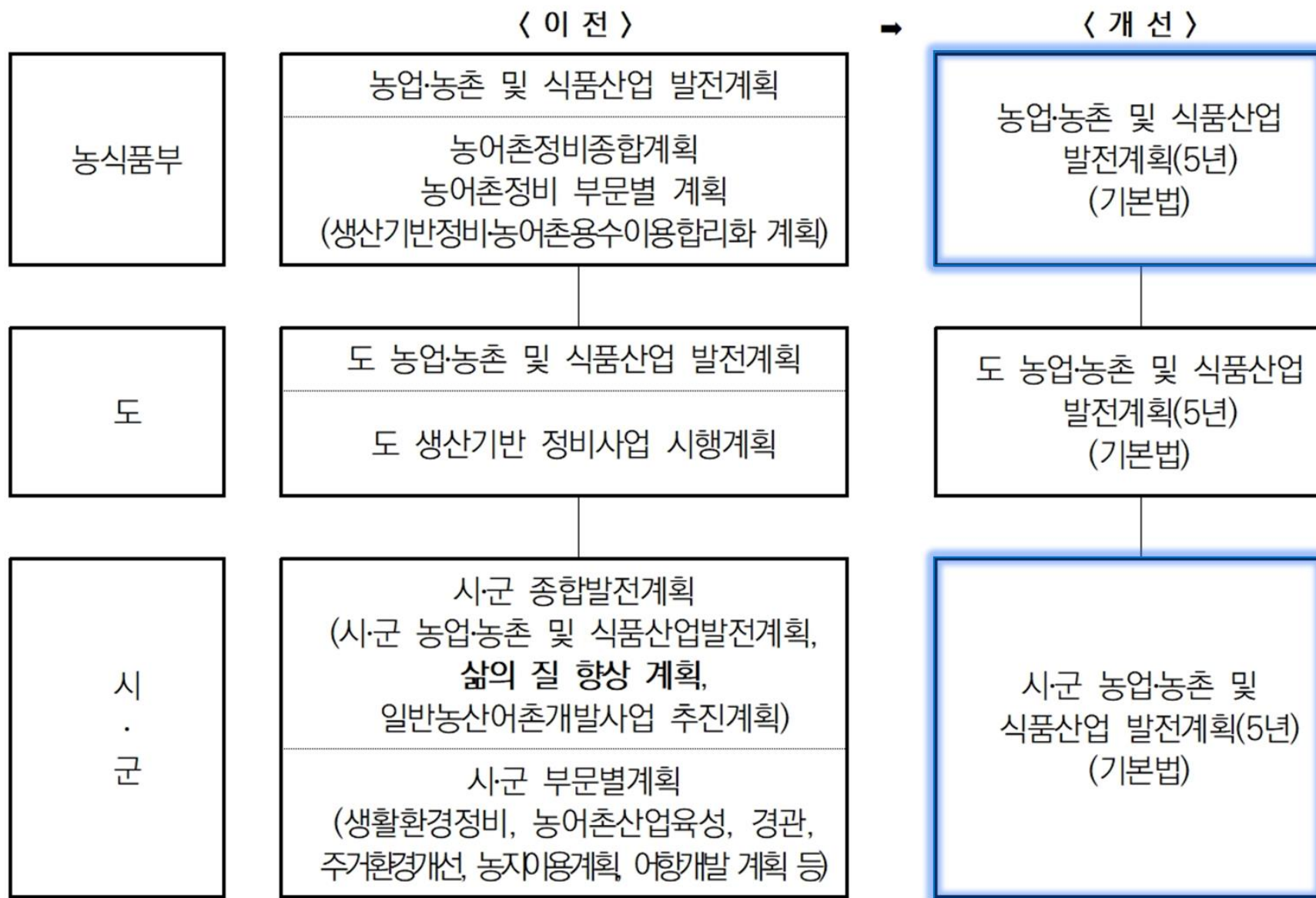
- ✓ 농업 생산성 향상 → 환경친화적 농촌 형성 등 시대 변화 반영

◆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과정의 제도화

- ✓ 주민이 수립한 마을계획에 기반한 공간 정비, 공동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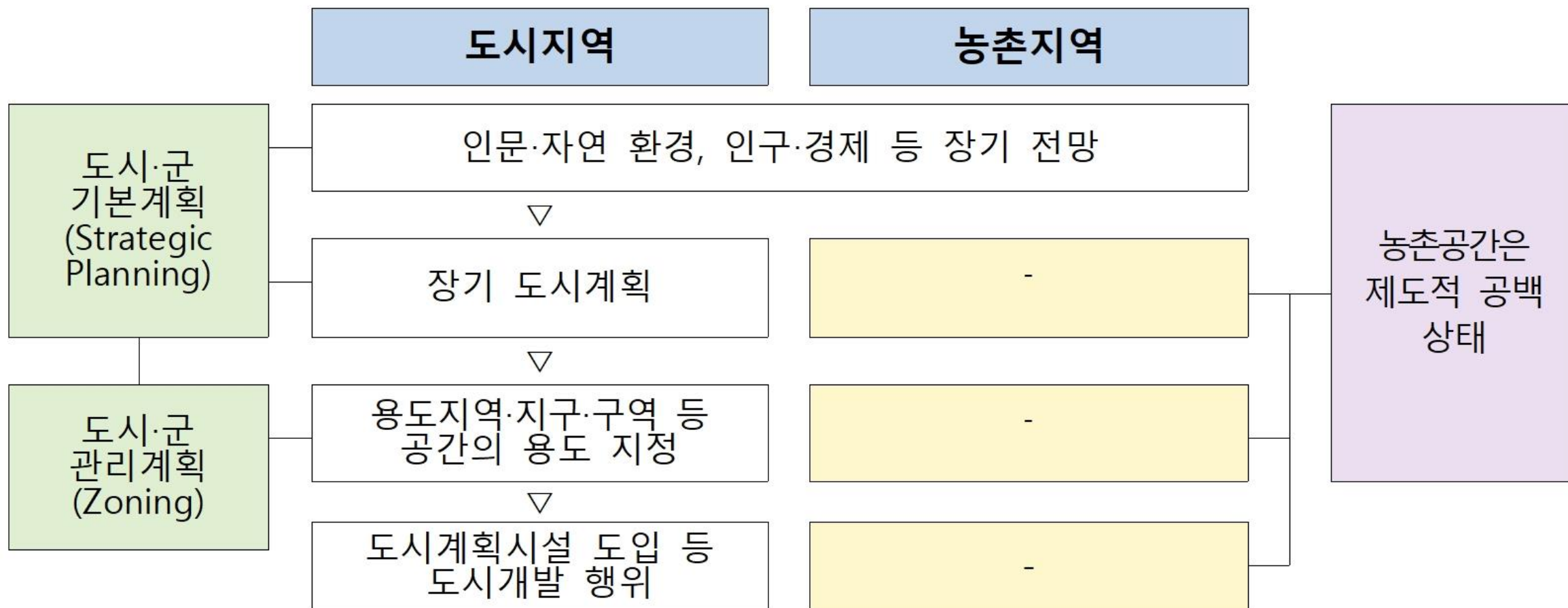
Ⅳ.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제도 여건

농촌의 관련 계획들을 통합한 농발계획 수립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은 부재

▶ 국토계획체계 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여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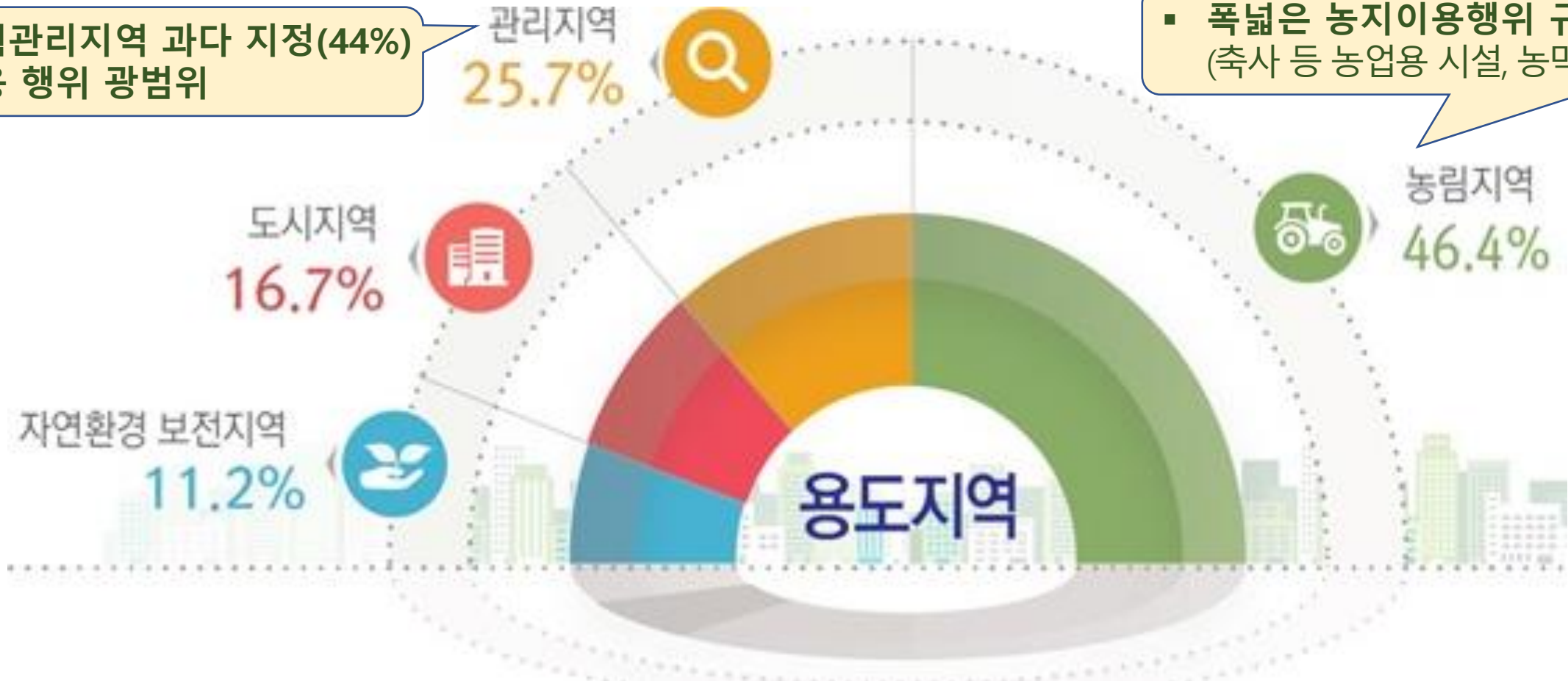


국토계획법에 의한 전국 용도지역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현황(2019년 기준)

- 계획관리지역 과다 지정(44%)
- 허용 행위 광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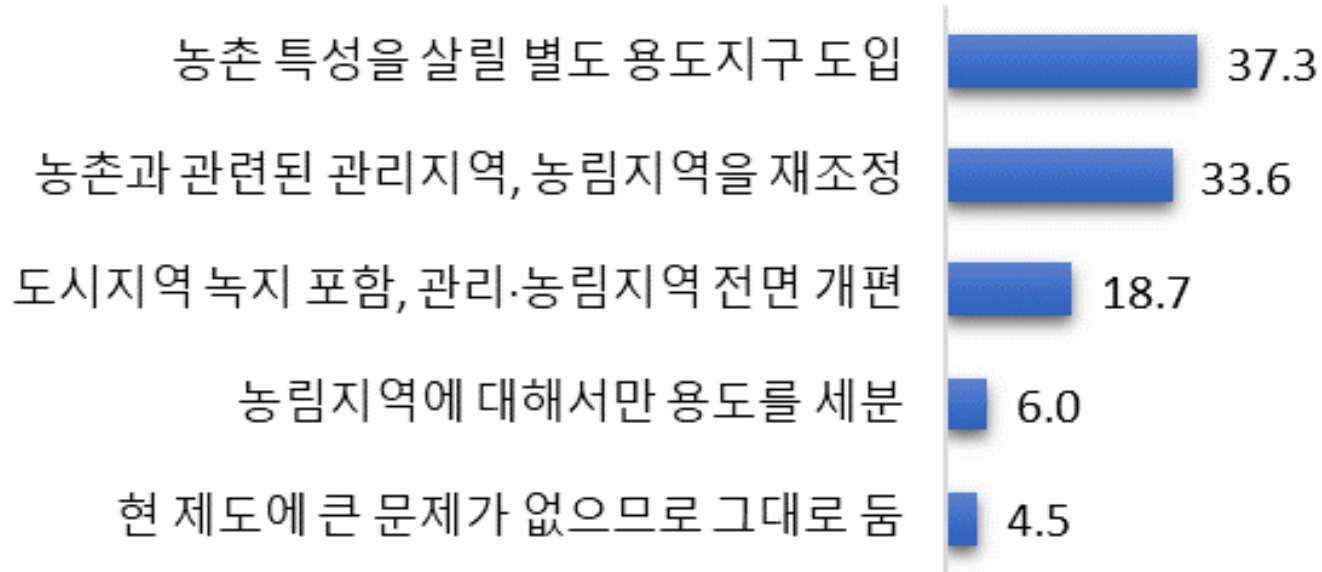
- 폭넓은 농지이용행위 규정
(축사 등 농업용 시설, 농막)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지구 제도 개편의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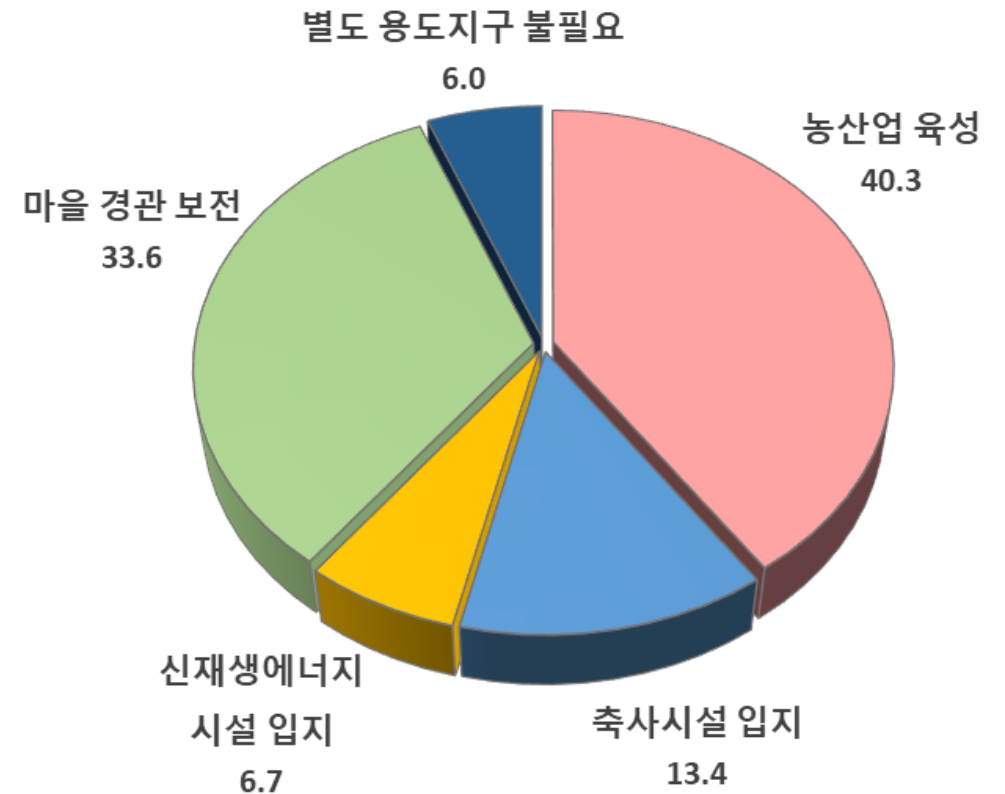
(A)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제도 개편 방향

(단위: %)



(B) 농촌에 도입할 새로운 용도지구 종류

(단위: %)



주: '20년 전국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96개 지자체 134명 응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V.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과제

농촌공간계획의 성격과 목적

농촌공간계획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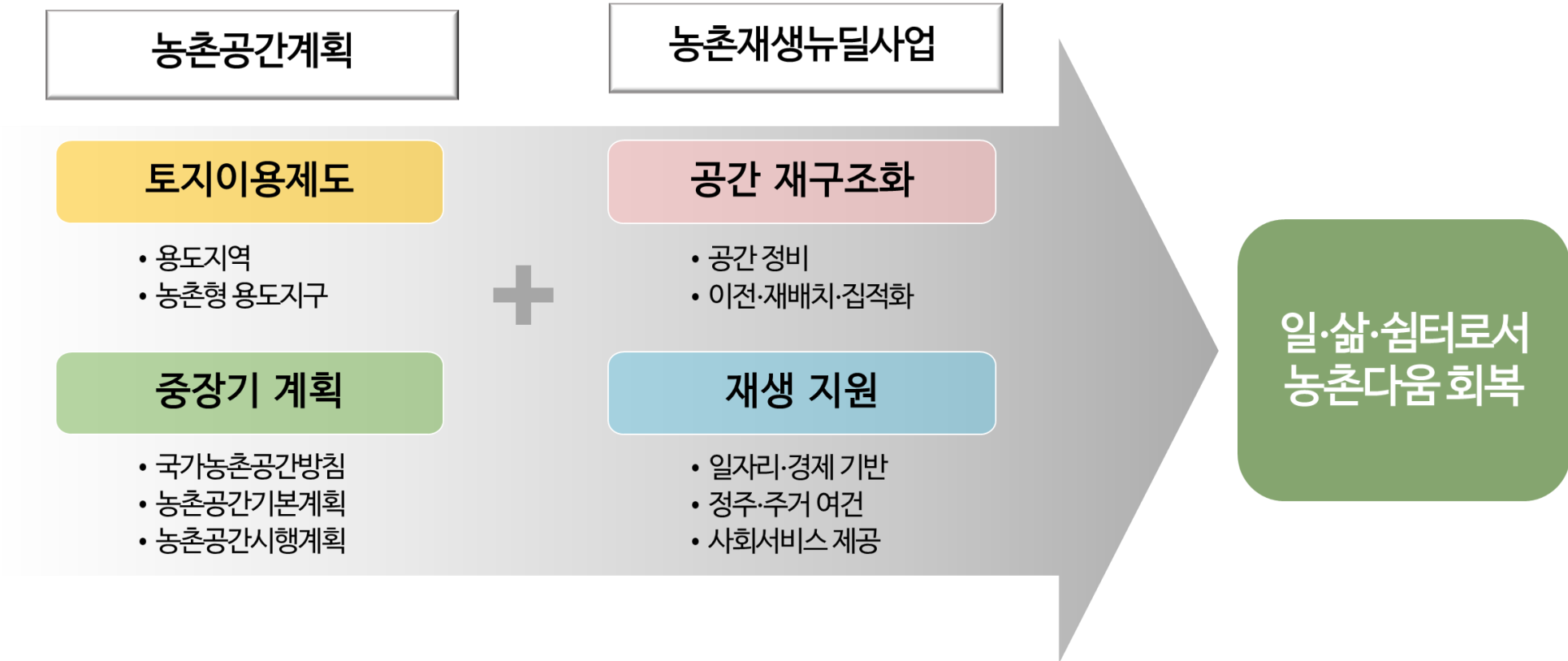
- ✓ 농촌지역의 난개발·저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에 따른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 ✓ 농촌의 자원과 공간구조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을 제시하고,
- ✓ 농촌개발사업과 농촌공간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전략계획

농촌공간계획 목적

- ✓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응**, 농촌의 가치 있는 환경·경관·문화 등의 자원을 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 **농촌 저개발 문제에 대응**,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농촌 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발전 전략 제시
- ✓ 중장기 농촌발전 전략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농업·농촌 분야 다양한 **사업들의 계획적 시행 원칙과 방향**을 제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바탕을 둔 농촌정책 추진



- **농촌협약**을 통한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 **주민협정**을 통한 공동체 주도 계획 지원
- 농촌공간계획 지원 체계 구축 (관리기구, 전문기구 등)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과제

농촌공간계획의 법률적 근거 마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 또는 신법 제정 등
- ✓ 농촌공간계획의 위상 정립(타 계획과의 관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범위

- ✓ (기초) 농촌협약 시·군 → 일반농산어촌 시·군 → 전체 시·군

토지이용규제 수단 확보

-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지구 보완 / 농지법 등의 행위제한 강화

예산 지원체계 정립

- ✓ 농촌협약을 통한 지원 사업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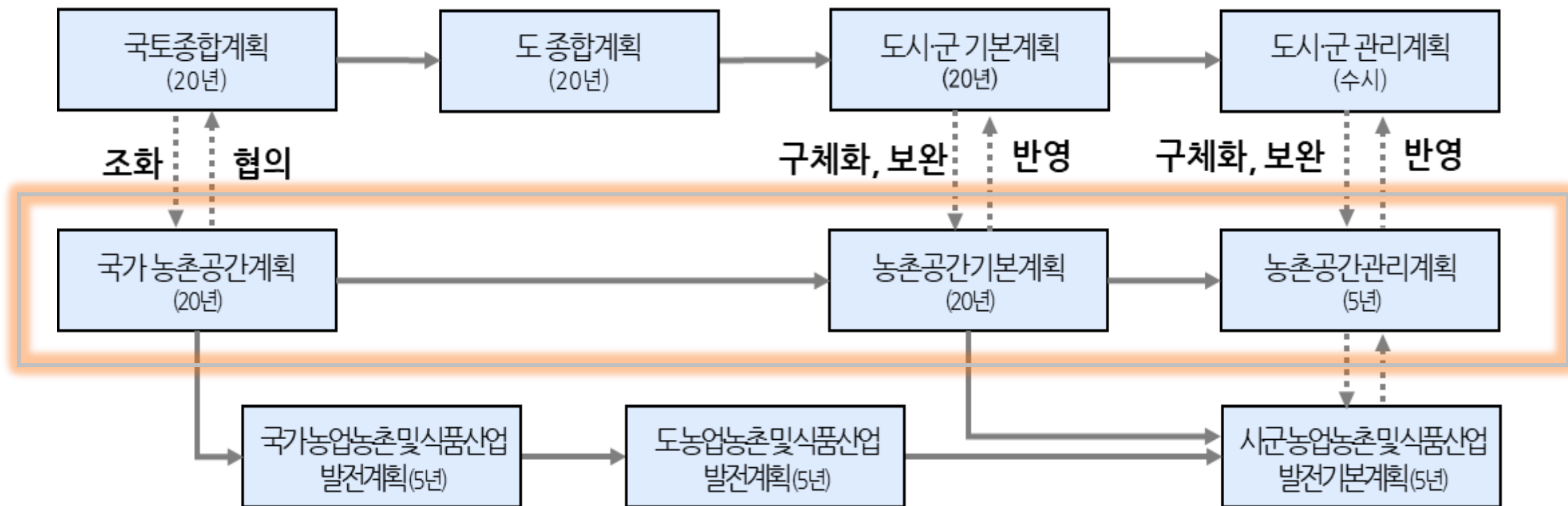
중앙 및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 개념

▶ 농업농촌 분야 타 계획 및 국토·도시계획과 연계성 확보

〈국가 단위〉

〈도 단위〉

〈시·군 단위〉



농촌 토지이용제도(용도지역) 개선: 계획관리지역 세분

▶ 계획관리지역 세세분 (주거, 상업, 공업, 복합 등 용도 구분)

구 분	지정 대상
정주환경관리지역 (주거계획관리지역)	집단화된 취락지가 형성되어 주택이 집적된 곳
상업업무관리지역 (상업계획관리지역)	공공기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는 곳
산업환경관리지역 (공업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곳
복합계획관리지역	융복합, 휴가·여가 등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곳
자연환경관리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농촌 토지이용제도(용도지역) 개선: 보전 용도지역 확대

▶ 현행 관리지역 조정 (계획관리지역 축소, 보전 용도 확대)

현 농촌 용도지역 면적비율

도시지역	주거 (0.7)
	상업 (0.1)
	공업 (0.6)
	녹지 (6.2)
관리지역	계획 (11.0)
	생산 (4.5)
	보전 (9.4)
농림지역 (45.6)	
자연환경보전지역 (10.8)	

토지적성평가 이후 면적 조정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촌 마을

자연취락지구 지정
(농촌계획지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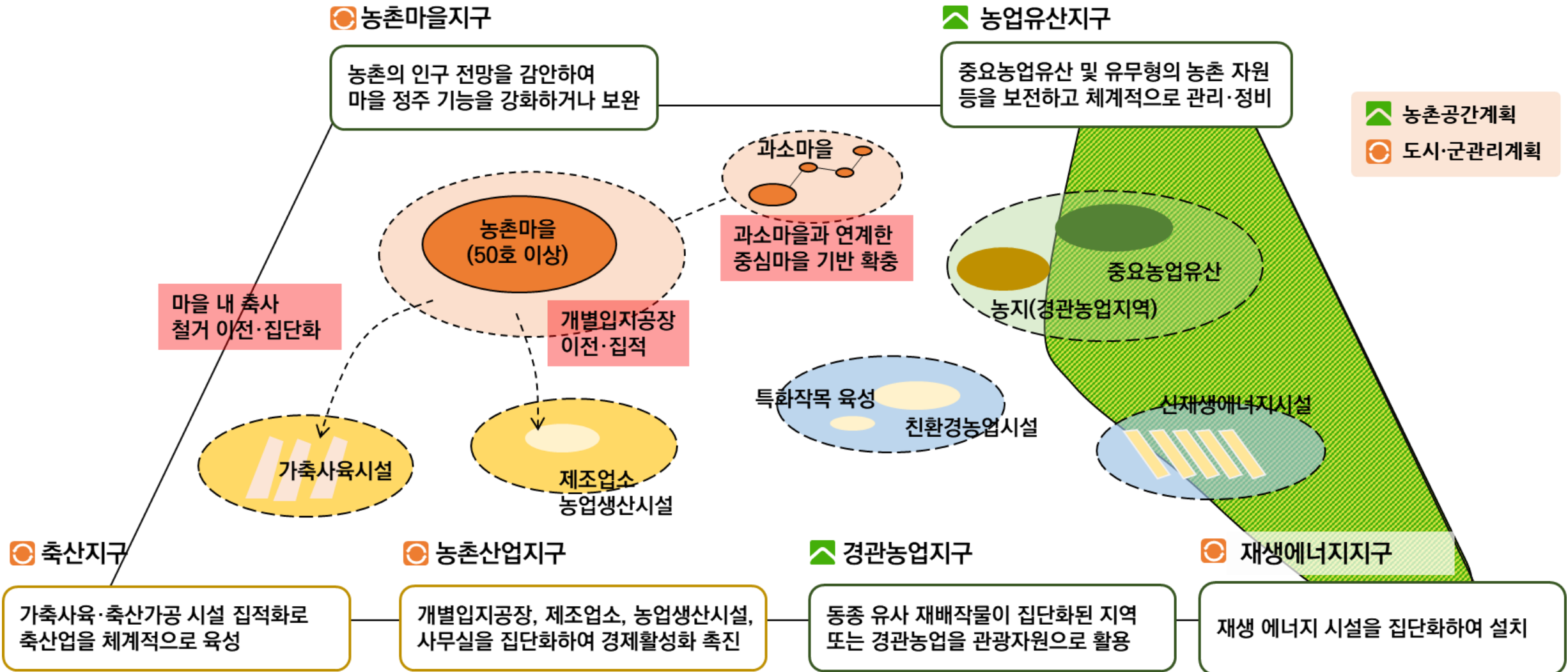
개별입지
공장

성장관리방안 확대
(농촌계획지구 도입)

계획관리지역
비중 축소 및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비중 확대

농촌 토지이용제도 개선: 농촌형 용도지구 도입

▶ 농촌형 용도지구(농촌특화지구) 도입,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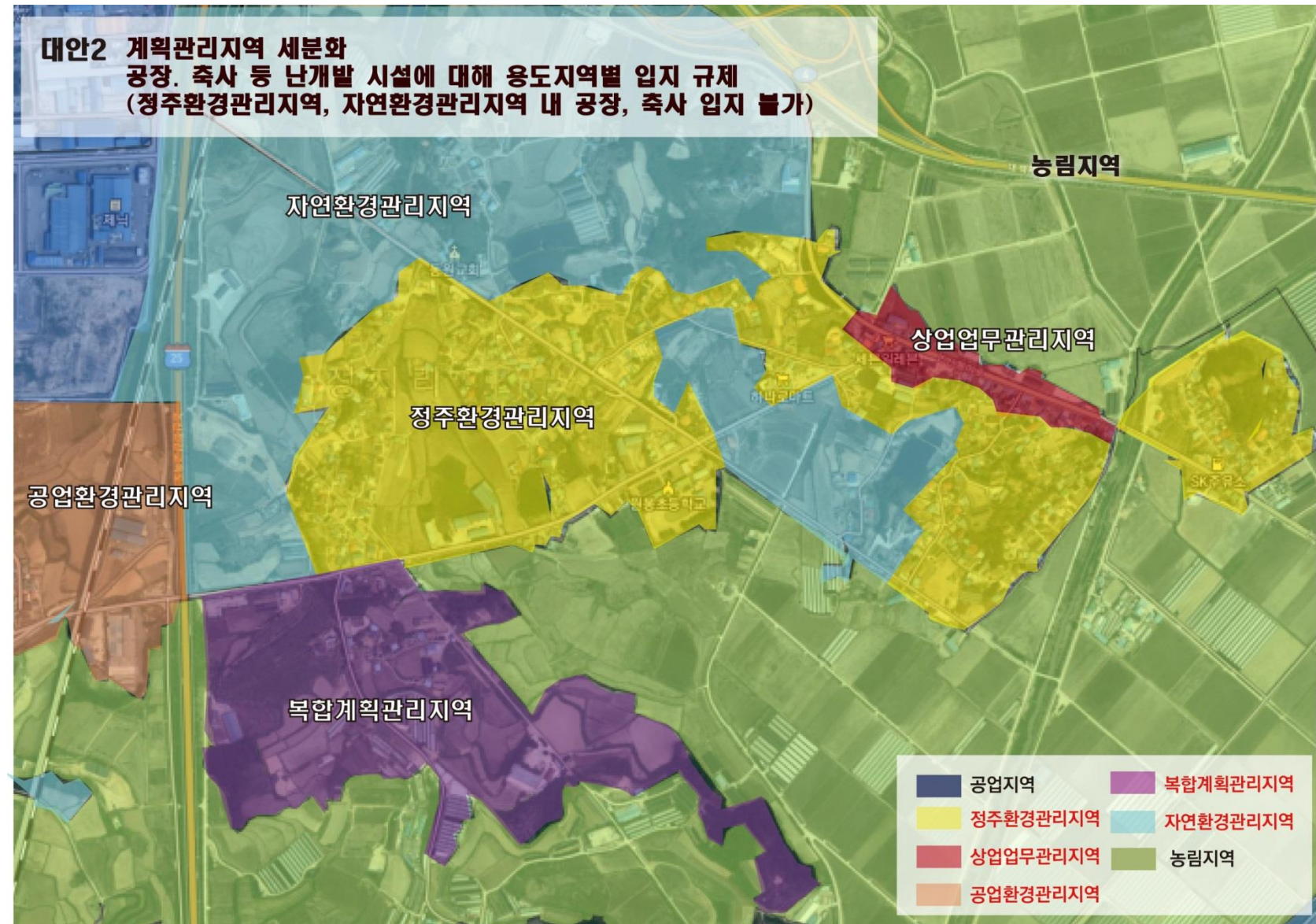
사례지역 농촌 토지이용 개편(안) 예시

▶ (현황) 공장, 축사 난립 (충남 B시)



사례지역 농촌 토지이용 개편(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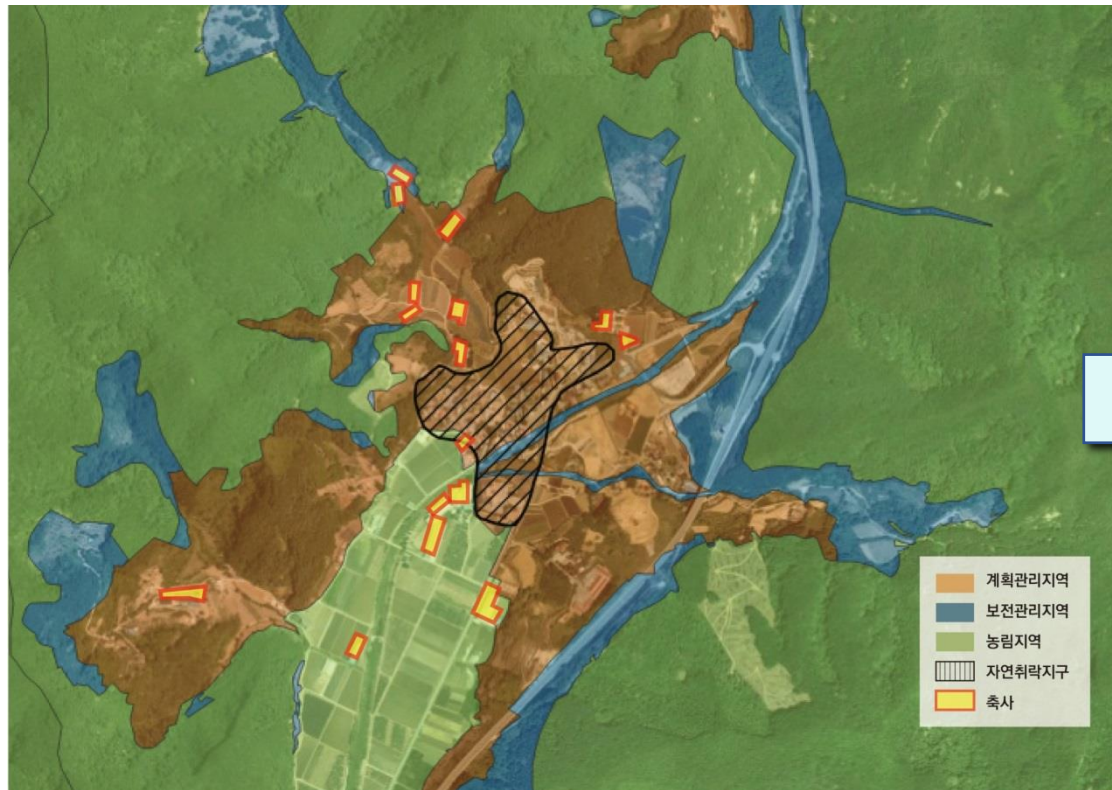
▶ (개편안) 계획관리지역 세분 (충남 B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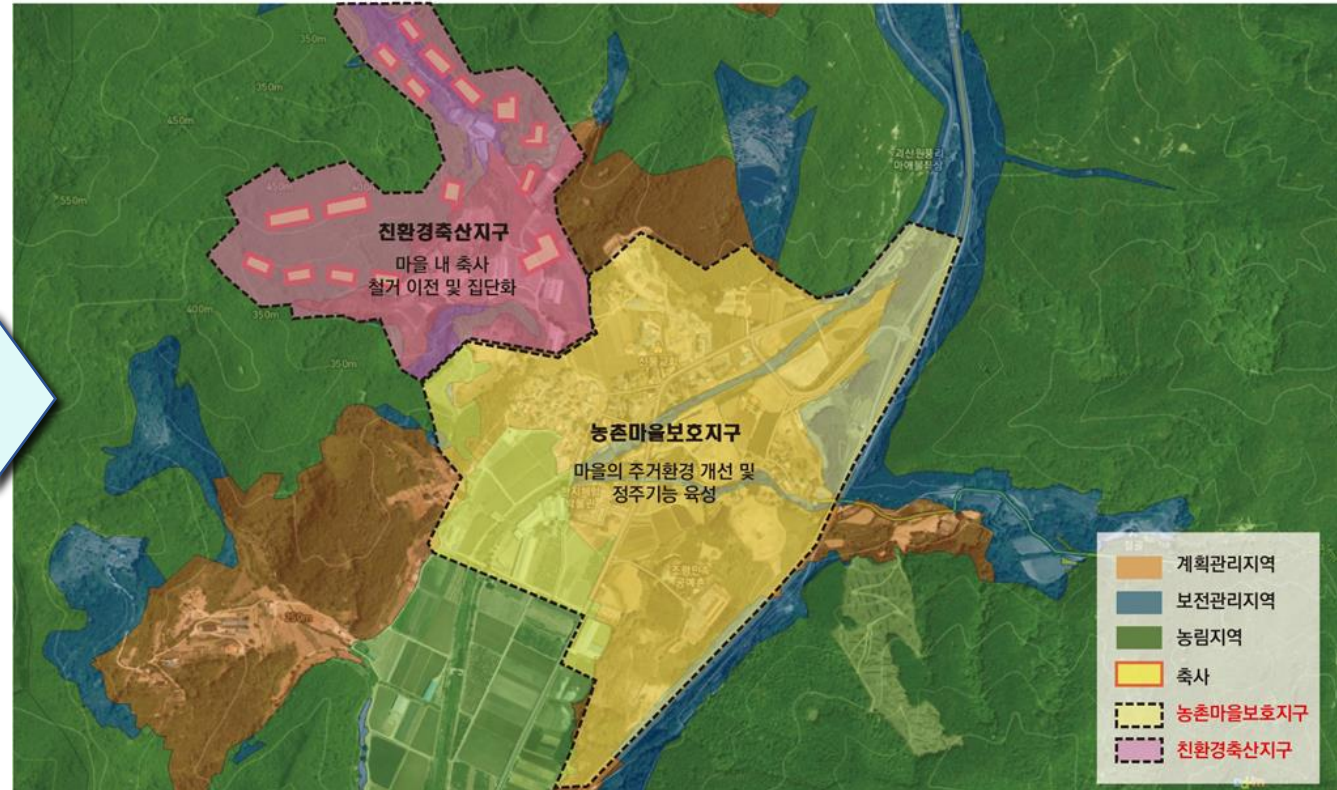
사례지역 농촌 토지이용 개편(안) 예시

▶ 농촌형 용도지구(농촌특화지구) 지정, 활용 (충북 A군)

(A) 현 재



(B) 개 선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서천군 송림2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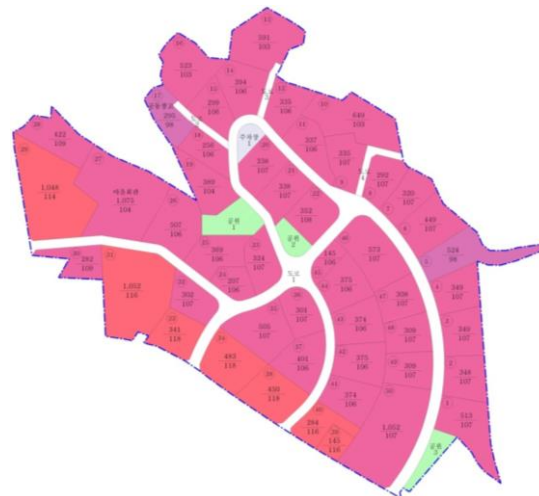
(A) 사업 착공 전(2013)



(B) 사업 완료 후(2016)



(환지 방식 적용)



▶ 사업 개요

- 기존 주택 리모델링(16호)
- 신축 부지 조성(30호)
- 마을 주택 가이드라인 적용
: 건축물 외관, 색채 조화 유도
- 다목적 마을회관, 공동생활홈 조성

(기존 주택 리모델링 전후)



(마을 인프라 정비)



농촌재생뉴딜사업 추진

▶ 농촌공간 및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재생사업' 추진



-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기능재생 사업을 패키지 사업으로 재편
- 농식품부 관련 사업 우선 연계 지원. 삶의 질 계획에 포함된 타 부처 사업 확장

▶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 지원

- 중앙정부는 메뉴방식 지원 가능 사업 제시
- 지자체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 선택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지원

▶ 농촌협약 지원 범위의 점진적 확대 (사업 범위 및 대상 지자체)

단계별 정책사업 확대		주요 사업 (예시)
1단계 (도입)	<u>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 추진</u> - 군특회계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원 - 지자체 이양 지역개발사업 포함	(중앙정부 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 & 기초생활거점 육성 - 농촌 신활력플러스, 시·군 역량강화 등 (지자체 이양 사업) - 농촌 마을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
2단계 (확산)	<u>농촌정책 분야 사업 전반으로 확대</u> - 농식품부 농촌정책 관련 사업 (군특 및 농특회계 사업 등)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 농촌형 교통모델
3단계 (제도 정착)	<u>선 계획-후 사업 지원체계 구축</u> - 농식품부 사업 전반의 포괄보조금화 - 지역 대상 지원사업 전반이 해당 * 필요시 지자체 자율로 타 부처 유관사업 포함	-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APC지원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종합)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재생 추진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마을 주거환경 저해시설(축사, 공장 등) 이전 및 계획적 입지

마을 단위 빈집 철거, 재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향식 농어촌 환경관리 프로젝트 추진

농업환경프로그램을 확대한 주민 주도 환경관리 활동 지원

농촌협약 등과 연계, 주민협정을 통한 마을 가꾸기 활동 확산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 미 령

mrsong@krei.re.kr

V. 패널토론